

1. 총평

2018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는 국가직 7급 난이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자주 출제되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문으로 출제된 문제(10번 신공공서비스론), 거버넌스 개념적 혼란으로 인해 조금 어렵게 느껴진 문제(3번 거버넌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출제된 8번(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18번(자연실험) 문제와 19번(공론조사, 2019년 알파행정학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문제는 처음 출제되었으나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은 우수, 75점~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4	개념문제	3
정책학	4	이론문제	11
조직이론	2	법령문제	4
인사행정론	5	학자문제	2
재무행정론	2	사례문제	-
지방자치론	1		
행정환류론	2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인사행정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조직이론은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과 학자문제를 포함한 이론문제가 16문제, 법령문제가 4문제로서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되었다. 항상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나 법령 문제의 경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중상 또는 상	3, 5, 8, 10.
중	4, 7, 13, 15, 16, 17, 18, 19.
중하 또는 하	1, 2, 6, 9, 11, 12, 14, 20.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덕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해설] ②(옳음) 행정국가시대에는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통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라는 표현은 옳다.

- ①(틀림)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덕적·자율적 책임은 임무적 책임(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 ③(틀림)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은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을 의미한다.
- ④(틀림)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④번 지문에서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권한이고, 우리나라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부통제에 속한다.

<대응적 책임, 임무적 책임, 법적 책임>

- (1)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정치적·도의적·외재적 책임이다.
- (2) 임무적 책임(responsibility) : 직무적 책임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수입자 및 공복으로서의 광범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3) 법적 책임(accountability) : 법규와 명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책임이다. 변명적·법률적·제도적 책임 등 비교적 한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91-902.

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해설] ④(틀림)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전략관리·성과평가시스템이다. 균형성과표는 추상성이 높은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성과관리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전략과 성과지표의 연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접근법이다. 다만 성과지표를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바꾸어주는 틀이다.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과정), 학습과 성장 등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균형성과표는 하향식 접근방법(미션-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한 평가시스템이기 때문에 ④번 지문은 틀리다고 보아야 한다.

- ①(옳음) 균형성과표를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재무관점은 투입변수로서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는 표현은 재무관점에 비추어볼 때 옳은 표현이다.
- ②(옳음) 균형성과표는 재무, 고객, 내부과정, 학습과 성장 등의 관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는 표현은 옳다.
- ③(옳음) 균형성과표는 고객 관점을 중시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83-384.

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 ②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 ③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 ④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해설] ②(틀림) ②는 규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총계적 오류(total error)는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적(일관적) 오류와 불규칙적 오류를 포함하여 총계적 오류라고 하기도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79-581.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③(옳음)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①(틀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분권위원회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틀림) 보충성은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시·군 및 자치구 사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사무 → 국가 사무). 즉, 국가는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④(틀림)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법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73-774.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해설] ④(틀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다.

<지방공기업법 78조의 2>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한 후 제출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연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39-434.

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 ②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 ③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 ④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해설] ②(옳음)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 ①(틀림)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을 감소하고 조달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③(틀림)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 ④(틀림)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934-940.

10.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설] ①(틀림)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이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로 느껴진다.

<신공공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 ①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 ②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에 기초하여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 ③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 ④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 ⑤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 ⑥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 ⑦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79-180.

해 팀제는 탈관료제 모형으로서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과거 직원-계장-과장-국장-부서장의 5단계 결재 계층을 팀원-팀장-본부장의 3단계 계층으로 축소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진 조직이다. 따라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한편,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필요하면서 등장한 조직이다.

- ①(옳음) 이중적 명령계통은 역할의 모호성을 조래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조정을 중시하나, 소속감 결여와 지휘명령계통의 다원화로 실질적으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 ②(옳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 따라서 인력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옳음) 매트릭스조직(matrix, 복합조직, 행렬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이다.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필요하면서 등장하였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15-418.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해설] ①(틀림) 프로그램 예산(사업군 예산, program budget)이란 관련성이 높은 몇 개의 단위사업(activity)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는 프로그램의 관리자(예 : 국장)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자율성에 따른 책임은 성과관리제도에 의해 확보된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에 도입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다.

구 분	입법과목					행정과목				
	(회계)	장	관		항	(회계/기금)	세항	세세항	목	세목
기 준										
현 행		분야	부문	(실/국/과)	프로그램	(회계/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예 시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 의료보장	일반회계	노인돌봄미바우처	사업운영지자체보조	물건비	운영비여비
분 류		기능별 분류		조직, 프로그램		회계 분류	사업별 분류		품목별 분류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64, 744.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해설] ②(틀림)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일반적으로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직의 동태적 항구성의 원인이 된다. 다만, 목표의 승계(succession)와 전환(diversion)을 구분할 경우,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조직의 최초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대신 다른 목표에 의해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목표의 승계(succession)	목표의 전환(diversion)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한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	조직의 최초의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대신 다른 목표에 의해서 대체된 경우
생산목표 변화, 산출목표 유지	생산목표 변화, 산출목표 변화
미국 소아마비재단이 소아마비의 예방·퇴치라는 문제를 해결한 후 장애아 출산 등 불구병 일반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한 것	1933년 Townsend 박사가 60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200 달러의 연금을 지불하여 퇴직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통과로 본래의 목적을 많이 잃게 되었다. 이때 이 조직은 정치적 운동단체로 탈바꿈하여 사교클럽으로 그 목적을 바꾸게 되었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66-267, 969.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②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 ③ 핵심운영(operation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 ④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해설] ④(틀림)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이 핵심 역할을 하는 조직 구조는 단순구조이다. 기계적 관료제 구조는 기술분석부문(technostructure)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분 류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사업부제	전문적 관료제	임시체제
핵심부문	전략정점	기술분석부문	중간 관리층	운영핵심	지원참모
조정수단	직접 감독	작업 과정 표준화	산출물 표준화	작업기술 표준화	상호 조정
환 경	단순, 동태적	단순, 안정적	단순, 안정적	복잡, 안정적	복잡, 격동적
규 모	소규모	대규모	대규모 조직 내 중·소규모	중·소규모	소규모
분화(전문화)	낮음.	높음(수평·수직적 모두 높음).	중간	높음(수평적). 낮음(수직적).	높음(수평적). 낮음(수직적).
공식화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통합·연결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집권/분권	집권	집권, 기술구조는 수평적 분권	다소간 분권	분권(수평적). 분권(수직적).	선택적 분권(수평·수직적 분권)
실행계획	미발달	발달	다소 발달	발달 미흡	범위 내 작동
교육·훈련	거의 없음.	빈약	중간	발달	발달
기타 특징	유기적, 융통성	계산·참모 구별	본부·부서 구분	전문가, 민주적	유기적, 융통성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366.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해설] ③(틀림)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은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한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배분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항공 노선 취항 허가의 경우, 항공노선을 다수의 경쟁자 중 소수에게 배분해주기 때문에 배분정책의 속성을 갖게 되고, 운항의 안전성을 위해 안전 요건을 갖춘 기업에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적 규제정책의 속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대 규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독과점 규제나 사회적 규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31-232.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은 자연적인 사건이나 정책 변화 등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비교하는 실험으로서, 인위적인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실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실험은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진실실험보다는 준실험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자연실험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충격이나 혹은 정책변동에 따라 그 실험환경이 조성되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면서 어떤 변수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자연실험>

(1) 개념 :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충격이나 혹은 정책변동에 따라 그 실험환경이 조성된다. 즉, 자연실험에서는 자연스럽게 거의 무작위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구분되면서 어떤 변수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실험은 진실실험보다는 준실험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2) 활용

- ① 누락변수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 ② 독립변수의 자기 선택 편의(self selection bias)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 ③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3) 장점 : 인위적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4) 단점 : 연구자가 원하는 실험 방식대로 자연실험이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36-338.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 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②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④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해설] ③(틀림) ③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다는 표현은 맞다. 그러나 공론조사의 경우 표본집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①(옳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을 지키기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여론조사 기구다. 7월24일 출범해 석 달간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할지 중단할지'에 대해 총 4차례 여론조사를 했다. 공론화위는 마지막 4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 ②(옳음)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옳음)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정정길 외)>

구분	여론조사(mass opinion)	공론조사(public judgment)
개념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인식 수준 진단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deliberation)를 거쳐 도출된 의견 조사
방법	•전화, 우편, 웹사이트 등 매체 활용 •수동적 참여	•과학적 표본추출 기법 •능동적 참여, 학습 및 토론 필수
결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	•학습 및 토론을 거쳐 선호 변경
장점	•많은 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
단점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 •표본 선정과정에서 대표성 확보 곤란 •피상적인 조사로서 조사의 정확성 결여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소요 •적은 표본집단 •집단 내 다수 의견 동조 현상 발생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86,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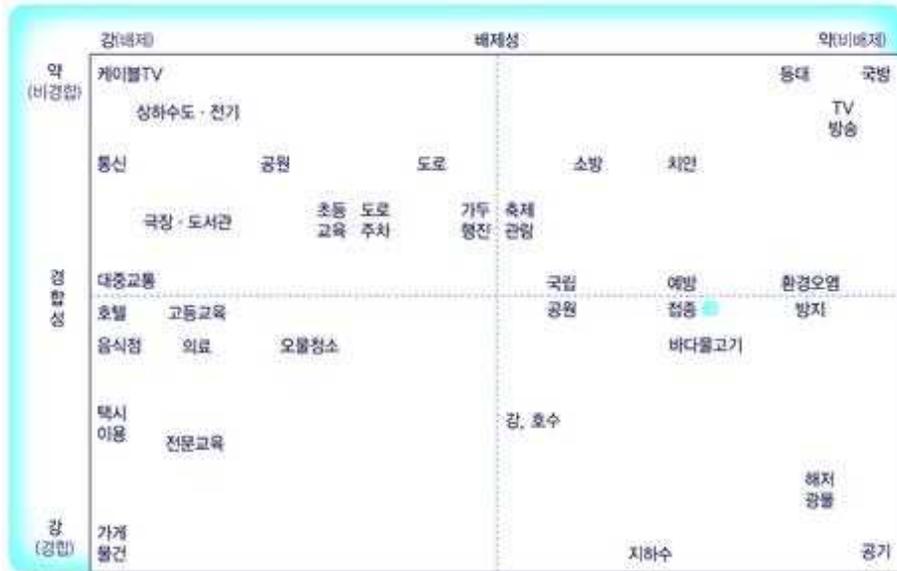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짚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배제성 여부 \ 경합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 | | | | | |
|---|-----|----------|------|--------|
| | A | B | C | D |
| ① | 구두 | 해저광물 | 고속도로 | 등대 |
| ② | 라면 | 출근길 시내도로 | 일기예보 | 상하수도 |
| ③ | 자동차 | 공공납시터 | 국방 | 무료TV방송 |
| ④ | 냉장고 | 케이블TV | 목초지 | 외교 |

[해설] ①(옳음) 구두는 민간재(A), 해저광물은 공유재(B), 고속도로는 요금재(C), 등대(D)는 공공재에 속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2-63.